

‘양안서비스무역협정’의 쟁점과 대만 사회 갈등구조 변화*

김민환** 정현욱***

| 목 차 |

I. 들어가는 글	IV. 족군 이해와 계급적 이해의 분리(2): ‘양안서비스무역협정’ 체결 논란과 계급적 분열의 전면화
II. 대만 사회 갈등구조에 관한 기존 논의들: 족군갈등과 통일-독립 이분법	V. ‘양안서비스무역협정’ 체결 논란과 세대 효과의 문제
III. 족군 이해와 계급적 이해의 분리(1): 양안 경제협력과 대만자본의 입장 변화	VI. 맺으며

| 논문요약 |

이 논문은 ‘해바라기학생운동’ 등 최근 대만에서 양안서비스무역협정 체결을 둘러싸고 진행 중인 논란을 대만 사회 갈등구조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만 사회의 갈등구조를 분석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족군갈등이나 족군갈등에 기반한 통일-독립 갈등을 변수로 삼은 반면, 이 논문에서는 양안서비스무역협정 체결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계급 및 세대 변수에 의해 보다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민진당을 지지하던 본성인 기업가들이 민진당의 입장과는 반대로 양안서비스무역협정 체결을 지지하는 점에 주목하며, 계급이익에 따른 민진당의 분화 가능성을 검토했다. 또한 2010년 ECFA 체결 이후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실업률이 약간이나마 낮아지거나 정체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20-24세 청년의 실업률

* 본 연구는 2014년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연구기반구축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SNUAC-2014-001).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 국립대만대학교 국가발전연구소 박사과정.

은 이 시기 동안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해바라기학생운동’의 배경에는 세대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논문은 향후 대만 사회의 갈등구조는 기존의 족군갈등과 함께 계급 및 세대 갈등이 교차하여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 주제어: 해바라기학생운동, 해협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양안서비스무역협정, 계급이해, 세대효과

I. 들어가는 글

지난 2014년 3월 17일, 대만 입법원(立法院) 내정위원회에서 국민당 장칭중(張慶忠) 입법위원이 30초 만에 ‘양안서비스무역협정(海峽兩岸服務貿易協議)’ 위원회 심사보고를 통과시키자 18일 새벽 대만 대학생들이 입법원을 기습 점거하면서 학생시위가 시작되었고, 이는 24일간의 입법원 점거라는 초유의 사태로 변졌다. ‘해바라기(太陽花)학생운동’¹⁾으로 확대된 반대 시위는 일반 시민까지 합세해 수십만 명이 가두시위를 하는 등 대규모의 양안서비스무역 반대운동으로 확산되었다.

대만의 대학생들은 입법원을 점거한 동료 대학생들을 지지하고 양안서비스무역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자신의 학교에 자보를 붙였다. 한국의 언론들은 대만에서 진행되던 이 사건을 소위 ‘대만판 안녕들하십니까’ 사건으로 지칭하면서, 그 당시 한국에서 전개되었던 한국 대학생들의 ‘안녕들하십니까’ 자보붙이기 운동의 국제적 확산이라는 관점을 암시하였다.²⁾ 한국에서는 대학생들의 입법원 점거 사실보다 자보를

1) ‘해바라기학생운동’은 입법원 점거 당시 이를 지지하는 한 시민이 학생 시위대에 4월 대만에 많은 꽃인 해바라기를 선물로 준 데다 다음 달 대만에 비가 내리면서 시위 참가 학생들이 노란색 비옷을 입고 시위에 참가한 것, 지난 1990년 학생시위의 이름이었던 ‘들백합 학생운동’의 선례 등의 이유로 이 같은 이름이 붙게 되었다.
 2) 가령, 『연합뉴스』는 2014년 3월 27일 “대만판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경향신문』은 같은 날 “대만판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주요 대학 곳곳에”라는 제목의 기사를, 『한국일보』는 역시 같은 날 “니하이하오마?... 대만에

불인 행위 자체가 더욱 주목을 받았던 것이다. 물론, 실제로 대만 대학생들의 자보불이기 운동은 한국의 '안녕들 하십니까' 운동에서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대만 대학생들의 의견이 소위 "22K"³⁾로 대변되는 저임금, 청년실업 등 암울한 현실에 대한 불만족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보편적인 성격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한국 언론의 이와 같은 접근은 이 사건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철저하게 '대만적 특수성'에 기반해서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약간의 형식적 보편성에만 집중하는 것은 본말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 시위는 한국에서 일종의 '에피소드'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지만, 대만에서는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지점을 드러내는 사건인 것이다.

이 논문은 이 사건을 철저하게 대만사회라는 맥락에 다시 위치시키면서 그것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는 시도 중 하나이다. 과연 왜 대만의 대학생들은 입법원을 점거하는 극단적인 행동에 나섰는가? 그리고 그들은 왜 그렇게 많은 지지를 받았는가? 향후 그것은 대만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다양한 측면에서 이 질문들에 접근할 수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대만 사회 갈등구조의 지속 및 변화라는 관점을 채택해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자 시도할 것이다.

도 '안녕들 하십니까' 열풍"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이외에도 매우 많은 한국언론이 이 사건을 다루었는데, 제목은 대동소이하다. 한국언론의 이 사건에 대한 기사들은 네이버 검색창에 '대만대학생 안녕들하십니까'라는 키워드로 검색(2014년 8월 8일 검색)하면 찾아볼 수 있다.

3)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만 실업문제가 심각해지자 대만 정부는 청년 취업을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2009년 3월부터 '대졸자(전문대 포함) 기업인턴제도(大專畢業生至企業職場實習方案)'를 마련해 기업이 최저 임금 2만 2,000위안(NTD)으로 대학 졸업생을 고용하면 정부가 기업에게 1만 위안을 지원한다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단기적인 취업률은 다소 상승했으나, 종전 약 2만 8,000위안에 달했던 대졸자들의 초임은 오히려 2만 2,000위안으로 하락했고 점차 고정화되었다. 2만 2,000위안을 일컫는 속칭 '22K'는 한국의 '88만원 세대'처럼 대만 사회 초년생들의 취업난과 낮은 임금을 가리키는 자조적인 말로 사용되고 있다. "大專畢業生至企業職場實習方案"에 대한 내용은 財團法人國家政策研究基金會(2011) 참고.

II. 대만 사회 갈등구조에 관한 기존 논의들: 족군갈등과 통일-독립 이분법

전통적으로 대만 사회 갈등구조의 기본 축은 대만 내의 족군(族群, ethnic) 분할에 따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만은 원주민, 두 가지 범주(민남인과 객가인)의 본성인, 외성인 등 4개의 족군으로 구성된 사회인데, 이들 사이에는 정체성 문제 및 정치·사회적 권력자원의 배분 문제 등에 따라 대립할 수 있는 여지가 상존한다. 특히 1980년대 후반까지는 1949년 중국내전에서 패배한 국민당을 따라 대만으로 후퇴해 온 외성인과 나머지 족군 사이의 대립이 매우 두드러졌다.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민당이 대만으로 후퇴할 무렵 중국대륙의 각 성 출신 인사 100만여 명이 '중앙정부'의 철수에 따라 대만으로 진입하였다(왕푸창 2008, 165). 이러한 이주민은 당시에 대만 전체 인구의 15% 정도에 불과했다. 나머지 85%의 대만인들은 이주해 온 15%의 사람들과는 매우 다른 정치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생활했던 사람이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중국대륙과의 일체성을 경험한 적이 거의 없었다.⁴⁾ 국민당을 따라 대만으로 옮겨온 외성인들은 중국대륙 전체에서도 중국공산당에 비해 소수파였지만, 그들의 본거지 대만에서도 소수파였던 것이다. 국민당이 대만에서 40년 이상 '계엄령'을 선포해서 억압적 통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처럼 그들이 '이중'의 소수파였기 때문이었다(김민환 2012, 145-149). 국민당은 정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대만에서 중국적 전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특히, 중국대륙의 '문

4) 대만의 경우, 중국으로 통치권이 넘어간 것은 1661년 정성공(鄭成功)이 '항청복명(抗清復明)' 운동의 근거지를 대만으로 옮기기 위해 당시 대만을 지배하고 있던 네덜란드 세력을 축출하고 새로운 기지를 확보하면서부터였다. 그 뒤로는 중국 청나라의 통치를 받았으나, '청일전쟁' 후의 시모노세키 조약에 따라 일본으로 할양되어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이런 '식민지적 분리'에서 벗어나 중국으로 다시 통합되었지만, 중국내전에서 패배한 국민당이 대만으로 쫓겨 오면서 중국대륙과는 다시 '냉전적 분리'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점을 확인하면, 대만이 중국대륙의 역사에 통합된 것은 350년 정도이지만, 그중에서 100년 이상은 정치적인 이유로 중국과 분리되어 있었던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100년의 역사에서 대만과 중국대륙이 통합되었던 것은 1945년에서 1949년의 4년뿐이다.

화혁명'에 대항하여 1966년부터 시작된 '중화문화부흥운동'은 이런 움직임의 절정이었다. 문화혁명이 중국의 전통을 파손하고 폐쇄하는 방향으로 흘렀기 때문에 국민당으로서는 문화혁명의 방향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던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대만은 문화적으로도 '대만'이 아닌 '중국'화되었다(윤영도 2007, 337-339).

국민당 주변에 결집한 소수의 외성인이 정치·문화적으로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수의 본성인들은 여기에 불만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본성인들은 외성인들의 권력독점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점차 움직여 갔는데, 이런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대만의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구성한다. 대만의 민주화 과정은 본질적으로 '본토화'라고 인식하는 연구(李筱峯 1990)나, 대만의 민주화 과정은 '민주화와 본토화의 이중주'라고 파악(양태근 2012)하는 경우⁵⁾나 공통적으로 그 배경에는 이런 본성인과 외성인 사이의 갈등을 전제할 수밖에 없었다.

1987년 마칩대 계엄령이 해제되고 대만은 민주화의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 민주화 국면에서 죽군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이것은 민주진보당(이하 '민진당')의 내분 및 분열 과정에 반영되어 있다. 대만 민주화의 상징은 바로 민주진보당의 창당이였다. 초기 민진당에는 국민당을 지지하는 세력 이외에는 거의 모든 세력이 합류했다. 그러나 여러 파벌이 모여서 조직된 정당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당의 실질적인 권력행사를 두고 많은 갈등이 있었다(지은주 2009, 144-146). 가장 큰 파벌은 '미려도파'와 '신조류파'였다. 미려도파는 신조류파보다는 온건한 세력으로 협상에 의한 체제개혁과 의회노선을 견지했으며, 대만독립보다는 정치민주화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했다.

반면, 1980년대 이후 등장한 신조류파는 체제개선과 대만독립이 민주화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여기에 해외에서 대만독립운

동을 전개했던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대만으로 귀국하여 대독연맹(대만독립연맹)이라는 이름으로 민진당 내 파벌을 형성했다. 여기서 승기를 잡은 쪽은 신조류파와 대독연맹이었다. 민진당이라는 한 지붕 아래 모여 있던 한국민당 파벌 중 '외성인' 집단들은 신조류파와 대독연맹이 득세하기 시작하면서 민진당 내에서 입지가 취약해지기 시작했다.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한 외성인들은 탈당을 선택하였다. 이들은 1960년대 중국국민주당 창당 때부터 국민당에 대항하는 새로운 정당 창당을 주도한 세력이었지만, 민진당이 1989년 대만독립을 당의 강령으로 채택하자 민진당이 대만독립보다는 민주화 문제를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탈당했다(지은주 2009, 149-150). 이들보다 먼저 민진당을 탈당한 세력도 존재하는데, 그것은 1987년 당내 소수파였던 '중국파'와 '진보파'였다. 그들은 신조류파가 지향하는 대만독립이나 본성인의 이익을 회복하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 계급의 동원'에 관심이 있었으며, 사민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대만의 정당지형이 계급갈등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민진당 내에서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그들은 결국 탈당을 선언하고 자체적으로 '노동당'을 조직하였다(지은주 2009, 250). 이처럼 민진당을 구성하던 다양한 분파들은 민진당 내에서 대만독립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커지면서 탈당하게 되고, 이는 다시 대만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의 성격을 고착시키게 했다. 국민당에 대항하는 가장 중요한 정당은 이렇게 대만독립을 주장하는 정당으로 점차 변하게 되었던 것이다.

민진당이 대만독립을 당의 강령으로 채택한 이후 대만의 사회갈등은 중국과의 통일 혹은 대만 독립이라는 이분법적 의견대립에 관한 것으로 급속하게 재편되었다. 그리고 몇 차례의 대만 총통 선거를 거치면서 독립-통일 논쟁이 핵심적인 선거의 쟁점으로 발전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은 증폭되고 일상화되어 갔다. 여기에 대만의 독립문제에 대한 중국대륙의 견제 및 개입도 대만사회의 갈등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더해지게 되었다.⁶⁾

5) 대만 민주화운동의 역사에서 외성인이지만 본성인과 연합을 통해 국민당 이외의 다른 정당을 건설하기를 원했던, '중국국민주당' 창당 주도 세력들은 민주화가 본성인과 외성인의 화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양태근 2012, 82-83). 대만민주화 운동을 '본토화'라고 파악하는 입장은 본성인의 입장에 가깝고, 대만민주화 운동을 '본토화와 민주화의 이중주'라고 파악하는 입장은 외성인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만민주화 운동에 대한 해석의 차이 자체에도 죽군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셈이다.

6) 대만을 구성하는 죽군들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민남인들이 민진당 중심으로 일정하게 사회적 힘을 얻게 되자 본성인을 구성하는 또 다른 죽군인 객가(客家)인들은 국민당 지지로 움직이게 된다. 그들은 대만에 정착하는 단계에서부터 민남인들과 경쟁관계에 있었는데, 민남인들이 대만에서 힘을 얻게 되자 위기의

이처럼 대만의 사회갈등을 다룬 기존 논의는 통일과 독립이라는 이분법적인 대립 및 죽군갈등이라는 전통적인 대립선에 주목하였다. 사실, 나중에 보겠지만, 최근 진행된 양안서비스무역협정을 둘러싼 논란을 이런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존재한다.⁷⁾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 사건은 이런 전통적인 이해 방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몇 가지 존재한다고 파악한다. 이것은 한편으로 대만 사회의 갈등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만 사회의 갈등구조를 바라보는 보다 섬세하고 새로운 틀을 이론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본 논문은 양안서비스무역을 둘러싼 대만 내 논란의 쟁점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대만 사회의 갈등요인을 잘 준별해서 그것의 새로움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새로운 갈등의 변수는 계급/계층 및 세대변수이다.

Ⅲ. 죽군 이해와 계급적 이해의 분리(1): 양안 경제협력과 대만자본의 입장 변화

1. 대만 경제발전모델의 죽군 이해(利害)적 측면

대만의 경제발전모델은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들 사이의 비교연구, 특히 한국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그 특징들이 규명되어 왔다. 가령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의 산업질서는 소위 '재벌'이라 불리는 대기업집단에 의해 장악되어 왔지만 대만은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질서를 형성했다

식을 느꼈다. 그래서 전통의 '강자'인 국민당과 연합하게 된다. 민남인의 부상에는 따른 객가인의 위기의식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2004년에 발생했다. 2004년에 대만 공무원 시험 '국어' 문제에 민남어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외성인들은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으나, 객가인들은 격렬하게 반발하였던 것이다(『自由時報』 2004/05/04). 이 논문에서 본성인은 대체로 민남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객가인들과 원주민들에 대해서도 사실 인지하고 있다. 다만, 논문서술의 전략상 객가인들과 원주민들의 존재는 부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7) 이를 잘 정리한 것이 정환우(2014)의 글이다.

거나, 한국의 생산체제는 대량생산설비 도입, 대기업의 위계적 구조,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내부 노동시장으로 구성된 전형적 포디즘의 형태를 띠고 있는 반면, 대만의 생산체제는 독특한 수평적 하청구조로 연결된 일종의 상호협조체제를 이뤘다는 연구(장영희 2012, 171-174) 등이다. 기술추격(technological catch-up) 과정에서도 한국은 고부채형 및 대기업 위주의 모델을 채택하면서 규모의 경제에 기반을 둔 기술발전을 지향했던 것에 비해 대만은 안정적인 자금투입과 중소기업 위주의 모델을 채택하면서 국제분업체제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는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기술발전을 지향했다(Wang 2007). 요컨대 대만은 중소기업 중심의 수평적 하청구조를 가진 경제발전 모델이었다는 것이다. 물론 대만의 이런 경제발전모델은 대만의 강력한 '발전국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정경유착'을 통해 혹은 민간 대기업에 대한 공세적인 금융지원이라는 정책을 통해 재벌들이 성장할 기틀이 마련되었다면, 한국에서와 같은 정경간의 유착이 대만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대만 정부는 산업 집중을 촉진하려 하지 않았고(스테판 해거드 1994, 146), 오히려 상류부문에 해당하는 대형 국영기업을 직접 설립하고 여러 우대 정책을 실시했다.

대만 정부가 대형 국영기업과 중소기업의 민간기업들로 나뉘는 이중적 경제구조를 만들어 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일부 논의는 일종의 '이념'으로부터 설명하는 것이다. 즉, 대만의 국부(國父)인 쑨원(孫文)이 주창한 삼민주의 중 경제생활의 방침이 되는 '민생주의'의 이념이 대만의 중소기업 중심의 발전모델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민생주의는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평등을 지버리지 않고, 경제력의 집중을 견제하고 '균부(均富)'에 대해 고려하며, 자본주의를 '규제' 또는 '제한'할 필요성을 주창하고 있는데(Gregor et al. 1982; 박윤철 2012a, 186; 장영희 2012, 175) 이 때문에 경제력의 집중을 제한하기 위해 민간대기업 성장을 억제했다는 것이다. 이런 설명은 과거 대만 정부의 공식입장에 가깝다.

다른 한편, 이것을 대만 내의 정치적 역관계, 특히 죽군 분열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하여 설명할 수도 있다. 사실, 이 논문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1949년 국민당의 대만 후퇴 당시, 국민당을 따라

대만으로 들어온 외성인은 100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들 중 많은 수는 군인들이었고, 나머지의 대부분은 '정치가'들이었다. 따라서 국민당 주변의 외성인들은 정치적 영역에서는 권력을 독점했지만, 경제적인 영역에서는 본성인들에 비해 우위를 잡아가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민간 부문의 성장은 필연적으로 대만 원주민들(인용자: 본성인들)의 위상을 제고시킬 것이고... 더욱이 그들이 획득한 경제력은 정치적 목적에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본토에서 이주해 온 중국인들은 이를 우려"(스테판 헤거드 1994, 138)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당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대만지배에 도전할 수 있는 민영 대기업의 성장은 반갑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국민당정부는 국영기업의 경제적 자원을 이용해 "후원-수혜관계(patron-client relations)의 기초 위에서 분할지배(divide and rule)"(박윤철 2012b, 158)를 실시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에서 한국과 같은 정경유착이 발생하리란 매우 어려웠다. 이런 관점에서 파악하면, 대만의 경제발전모델은 그 내부에 이미 죽군 간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해야 왜 대만의 몇몇 민영기업인들이 1980년대 초반부터 천수이벤(陳水扁) 전 총통을 후원해 왔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포모사(Formosa)그룹이나 장롱(長榮, Evergreen)그룹의 대표가 국민당의 눈치를 보면서 천수이벤을 후원해 온 것은 그들의 계급적 이해관계가 천수이벤의 죽군적 이해와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이었다. 이들 대만 자본은 자신들의 성장을 억제하는 국민당을 지지할 수 없었고, 따라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칠 대안세력의 성장을 모색했던 것이다.

2. 양안 경제협력과 본성인 자본의 모순적 위치: 민진당 지지와 계급적 이해 사이에서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민진당의 천수이벤이 대만의 총통이 되자 이들의 관계는 훼손되기 시작하였다. 민진당과 천수이벤은 대만 자본의 특정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힘든 구조적 제약 속에서 움직여야만 했기 때문

이다. 그 구조적 제약이란 대만자본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었던 '대륙'으로의 접근을 정책적으로 제약할 수밖에 없었던, 대만독립을 주장한 그들의 정치적 입장이었다. 반면, 대만 자본은 자신들의 성장을 위해 중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했다. 이 기회를 현실화한 것은 민진당이 아닌 국민당 정권이였다. 결국 대만에서 양안 경제협력의 전개된 과정은 민진당-대만 자본 연대에서 국민당-대만 자본 연대의 이행과정이었다.⁸⁾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양안의 경제협력은 중국대륙이 개혁개방과 함께 1980년 4대 경제특구⁹⁾를 설치하고 홍콩·대만 중심의 해외 화교자본을 유치하고자 했던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대만계 기업들의 간접적인 대륙 진출이 급증하였고, 이는 자연스럽게 양안의 민간교류와 그에 수반되는 제반여건이 점차 확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할 수 있다. 양안 무역의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급속한 경제발전을 통해 값싼 생산요소의 제공처이자 잠재적인 시장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된 1990년대부터 양안무역은 빠른 증가세를 보여 2003년에는 50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이는 중국대륙이 미·일·아세안을 제치고 '중국대만'¹⁰⁾의 최대 무역국가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2006년에는 양안무역의 규모가 1,0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13년에는 1,9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¹¹⁾

양안의 경제협력에 접근하는 대만 정치세력의 입장은 크게 차이를 보

8) 장롱과 회장은 대만의 제13대 총통 선거가 있기 전인 2012년 1월 3일 기자들과의 비공식 석상에서, 국민당의 대중국 정책인 '92컨센서스(九二共識)'가 대만경제에 보다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당 마잉주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민진당 차이잉원 총통 후보와의 회견을 거절하였다. 그는 "국민당, 민진당에 관계없이 유일한 걱정거리인 미래의 대만경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불과 십여 년 전인 2000년만 해도 장롱과 회장은 민진당 천수이벤 총통 후보를 지지하는 '구국고문단'의 멤버였다(『鳳凰網』 2012/01/04; 『中時電子報』 2014/01/03).

9) 중국은 1980년 3월 광둥성 선진(深圳), 산터우(汕頭), 주하이(珠海)와 푸젠성 샤먼(廈門)을 4대 경제특구로 개방하고 홍콩, 마카오, 대만 자본과 외자, 해외 화교 자본을 개방한다. 이 중 실제 투자 규모와 경제성장 건인 효과 측면에서 홍콩과 대만 자본의 영향이 가장 컸다.

10) 현재 중국과 대만 정부가 합의한 양자 교류 시 쌍방에 대한 공식 명칭은 '중국대륙(大陸)'과 '중국대만'이다.

11) 중국해관총서(中國海關總署) 통계 참고. <http://www.customs.gov.cn>. (2014년 9월 2일 검색)

었다. 본성인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민진당의 경우, 양안 경제협력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움직였다. 반면, 국민당의 경우, '대만독립론'이 강하게 제기된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특히 양안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물론 1990년대 후반까지 정권을 담당한 리덩후이(李登輝)의 국민당은 한편으로는 리덩후이 개인의 '대만독립파'로의 입장 강화¹²⁾와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던 냉전적 두려움 때문에, 양안 경제협력에 주저했었다. 가령, 1996년 국민당정부는 기업들의 대규모 중국진출로 인한 경제안보적 영향력을 우려하여 기업들의 대륙진출을 규제하는 의미의 '계급용인(戒急用忍: 서두르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접근하자)' 정책을 발표하는 등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장영희 2012, 178). 그러나 민진당의 천수이벤이 집권한 2000년 이후, 또한 리덩후이가 탈당한 이후 국민당은 양안교류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게 된다.

민진당 정부는 2002년 '일변일국(一邊一國)¹³⁾'을 제기하여 독립노선을 분명히 하였다. 이런 입장에서는 중국대륙과의 교류에 적극적일 수는 없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대만 민영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교류를 제한하는 민진당의 정책에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이를 드러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창롱(長榮, Evergreen)그룹 장롱파(張榮發) 대표의 천수이벤 공개비판이다. 창롱그룹은 계열사로 예비항공을 운영하고 있었다. 천수이벤의 오랜 후원자였던 장롱파는 천수이벤에게 중국대륙과 직접 연결되는 항공노선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천수이벤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 사건 이후 창롱그룹은 공개적으로 천수이벤과 민진당 정부를 비판했던 것이다(『商業周刊』 2003/04/18). 중국대륙과 직접 연결되는 항공노선이 허락된 것은 2008년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가 정권을 잡

12) 집권 2기에 들어선 리덩후이는 대만독립 노선을 강화해서 국민당 내외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는 1996년 미국을 방문해 대만과 중국은 별개의 국가라는 '양국론'을 제기했는데, 이는 대만해협의 '미사일 위기'로까지 이어졌으며, 1999년 총통선거에서는 국민당을 탈당하고 '대만독립파' 진영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13) 당시 중국의 양안일국(兩岸一國)에 대응한 개념으로, 중국과 대만은 각각 다른 국가라는 노선을 주장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 중국은 2005년에 '평화통일' 원칙 하에서도 무력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반(反)국가분열법'을 제정하며 대립하기도 하였다.

은 후 중국대륙과의 삼통(三通, 직항·교역·우편교환) 실시 이후였다.

이처럼 민진당이 정권을 잡은 2000년 무렵부터 대만 민간자본은 자신의 과거 죽군이해보다 계급이해에 더 민감해졌으며, 이런 경향은 '해협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 국면에서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만의 '자본가'를 제외하면, 이 시점까지 대만 사회는 과거의 전통적인 갈등 축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3. '해협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체결과 지속되는 전통적 갈등

2008년 국민당의 총통선거 승리는 보다 긴밀한 양안 경제협력 관계의 구축으로 이어졌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2010년 '해협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海峽兩岸經濟合作架構協議, 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이하 'ECFA'로 표기)의 체결이었다. ECFA는 상품과 서비스 무역 개방과 양안의 투자 보장, 지식재산권 보호를 골자로 하며, 2011년 1월 1일부터 곧바로 조기수확프로그램을 통해 관세가 인하되면서 통계상으로 양안 무역확대 효과가 즉시 나타나기도 하였다.¹⁴⁾

ECFA 체결과 관련해서 대만 내의 반대 의견은 대만의 민간 자본이 계급적 이해관계에 따라 찬성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여전히 전통적인 죽군이해 혹은 통일·독립논쟁의 연장선에서 제기되었다. 이것은 양안 경제협정의 공식 명칭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ECFA는 추진 단계에서 협정의 명칭을 포괄적 경제협정을 뜻하는 CECA(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이 명칭이 중국과 홍콩이 2003년 체결한 '경제긴밀화협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결국 포기되었다. 민진당은 CECA가 CEPA를 연상시키고, 그것은 결국 '하나의 중국(一個中國)과 중국과의 통일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반발하였던 것이다. 마잉주 정부도 대만의 홍콩화에 반감이 큰 민심을 우려해 결국 양안경제무역협정의 명칭을 ECFA

14) 조기수확프로그램을 위시하여 ECFA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문명기(2012, 102-103)의 논의를 참조할 것.

로 최종 결정하였다(國家政策研究基金會, 2009). 사실 'CECA' 체결은 2008년 대만의 총통선거에서 마잉주 후보의 공약이었다. 당시 민진당 후보 세창팅(謝長廷)은 이 공약에 대해서 “대만시장을 대륙에 종속시키려는 것(一中市場)”이라고 공격하면서 ECFA(CECA-인용자) 체결은 대만 '주권'을 팔아먹는 행위라고 비난했고, 이 문제가 2008년 대만 총통선거의 핵심쟁점의 하나를 형성”(문명기 2012, 107)했다. 2010년 ECFA 체결 직후 민진당이 전개한 ECFA 반대운동의 논리도, 비록 ECFA가 대만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그것의 핵심에는 ECFA가 대만의 '주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정치적인 부분에 있었다.

결국, ECFA 체결 시점까지도 대만 사회는 계급적 이익을 위해 대만 본성인의 족군이해와 거리를 둔 대만 민간자본을 제외하고는, 전통적인 갈등 축을 중심으로 갈등구조가 재현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ECFA 체결 당시 후속조치 중 하나로 결정되었던 '해협양안서비스무역협정' 체결을 둘러싸고 그 논의의 지형이 매우 다양해졌다. 특히 양안서비스무역협정 반대운동의 과정에서 제기된 반대논리는 더 이상 대만의 '주권'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차원에만 머물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 양안서비스무역 반대시위에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인 것이다.

IV. 족군 이해와 계급적 이해의 분리(2): '양안서비스무역협정' 체결 논란과 계급적 분열의 전면화

1. '양안서비스무역협정' 체결 추진의 배경과 내용

양안서비스무역협정은 2010년 ECFA 체결 당시 향후 일정으로 제시된 관세감면, 서비스업 개방, 투자합작에 관한 3가지 후속 협의 내용 중 하나이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 서비스업에 관한 투자, 경영, 취업 방면의 규제를 크게 낮추고 시장 개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협정에 따

라 서로 간에 개방해야 할 서비스업의 목록과 이에 따라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업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1> 양안서비스무역협정에 따른 개방 서비스업과 손실 예상 서비스업

구분	중국	대만
개방 항목 수	80개	64개
개방 서비스업 (항목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기업의 단독투자 범위를 확대하거나, 대만기업의 지분율 인상(40개) - 대만기업의 경영 지역과 업무 범위 확대(15개) - 승인 간소화 등 대만기업의 중국 투자 편리화 조치(2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 금융부문에 있어 중국기업의 대만 투자 신규 증가 및 확대(55개) - 금융부문에 있어 중국 기업의 대만 투자 신규 증가 및 확대(9개)
타격 예상 서비스업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상거래, 컨설팅 서비스, 컨벤션, 온라인게임, 대만도서, 공연장 경영, 영화 포스트 프로덕션, 해운서비스, 여행사 및 여행 서비스, 금융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쇄업, 미용 및 이발, 세탁업, 장래 관련업, 건설, 양로, 공연장 경영, 전통약재 도매

* 財團法人海峽交流基金會·海峽兩岸關係協會(2013); 童振源(2009)

중국의 경우, 대만에 대한 경제정책이 점진적이지만 비교적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다. 양안서비스무역협정 체결에 있어서도 그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화교자본 개방을 통한 대만기업 개방에 있어 점(點)에서 면(面), 즉 4대 경제특구와 같은 몇몇 거점에서 거점 주변으로 확대된 지역경제권과 전체 중국으로 확산시켰고, 이후 ECFA 체결 후 상품 개방, 서비스 점진적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또 중국은 대만과의 상품, 서비스무역 전면 개방을 국내의 지역경제개발 전략, 나아가 중화경제권 구상과 같은 선상에 두고 있다. 2011년부터 정식으로 해협서안경제구(海峽西岸經濟區, 이하 '해서경제구'로 표기) 개발을 추진하면서 푸젠성(福建省)과 대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설정하고, ECFA 및 양안서비스무역협정을 해서경제구 개발계획과 연결시킨 것이다. 이는 대만과의 경제통합, 정치통합, 양안통일이라는 국가전략 속에 포함된 것이며, 화인 집단이 핵

심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는 일부 동남아 국가들까지 포섭하는 것으로서의 대중화경제권(大中華經濟圈)과도 이어지는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반면 대만의 경우, 대학생들의 입법원 점거와 그후 이어지는 '해바라기 운동'을 통해 양안서비스무역협정 체결을 잠정적으로 무산시킬 정도로 양안 간 경제통합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¹⁶⁾ 그런데 대만 내부에서 전개된 이런 반대여론 및 움직임은 이전의 ECFA 체결 반대 국면의 그것들과 비교했을 때,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엄청나게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2. 대만 사회 갈등구조 변화에서 '양안서비스무역협정' 체결 논란의 위치

2010년 ECFA 체결 당시에도 대만 사회에서 찬반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2014년 '양안서비스무역협정' 체결 과정에서와 같은 폭발적이고 지속적인 반대운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차이는 근본적으로 ECFA 체결 이후 4년 간의 실제 체험에서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즉, ECFA 체결 당시에는 '이것이 체결되면 대만의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예측을 기반으로 찬반의 입장이 갈릴 수밖에 없었다면, 양안서비스무역협정 체결과 관련된 논란에는 ECFA 체결 후 4년의 구체적 경험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ECFA 체결을 앞두고 친국민당적인 중화경제연구원(中華經濟研

15) 해서경제구는 중국 푸젠성 정부가 2004년 제기한 전략 구상으로, 중국 국무원이 2011년 3월 정식으로 '해협서안경제개발전략구획'을 통과시키면서 추진되었다. 이는 대만을 중국의 지역 중 하나라는 전제 하에 궁극적으로 대만과의 경제, 정치적 통합을 염두에 두고 지역경제개발 전략을 추진한 것으로, 중국 푸젠성 지역과 대만을 한 데 묶어 경제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2011)의 논의를 참조할 것.

16) 양안서비스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입법원 점거 및 대규모 시위사태는, 대만정부로부터 '관리감독조례' 제정 및 서비스무역협정 재검토를 약속받은 학생들이 자진 해산하면서 끝났다. 그러나 그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리감독조례 제정은 이미 입법 검토에 들어갔지만, 각 계층이 서로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어 입법원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올레(2014년) 11월에 대만은 지방공직자선거를 치를 예정인데, 이 선거 국면에서 양안서비스무역협정 체결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선거의 결과에 따라 체결 재검토 여부 및 실질적인 개정폭 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究院, 2009)¹⁷⁾은 ECFA 체결로 대만은 연간 GDP 1.65-1.72%의 성장과 산업총생산액 2.75-2.83% 증가, 취업률 2.5-2.6%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반면, 비교적 "민진당에 가까운 대만경제연구원은 GDP의 감소는 물론 전기전자업 등에서 12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했다."(문명기 2012, 107) 양안서비스무역협정 체결이 추진된 4년의 기간은 이 두 예측 중 어느 것이 맞았는지에 대한 검증기간이었던 것이다. 이 논문에서 ECFA 체결 이후 4년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어느 예측이 맞았는지를 판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양안서비스무역협정 체결과 관련된 격렬한 반대운동이 전개된 것은 4년간의 경험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대만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이 부정적 평가의 근거는 사실 양안서비스무역협정 반대운동 진영의 여러 논리에 투영되어 있다. 다음 절에서 살펴보겠지만, 그 논리의 핵심은 중국과의 경제협력 과정에서 이익을 본 측과 그러지 않은 측의 분리이다. 이것은 양안 경제협력의 성과를 계급적 이익의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시도이며, 대만사회의 갈등구조를 계급갈등에서 계급갈등으로, 혹은 적어도 계급갈등과 계급갈등의 교차구조로 이해하려는 중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앞 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대만의 본성인 민간자본은 양안의 경제협력이라는 관점에서 계급이해보다는 계급이해를 택했다. 그리고 그것의 열매는 비교적 달콤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과정에서 전통적인 중소기업 중심의 대만경제 구조는 이미 변했고, 민영 대기업이 출현했다는 연구들이 최근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가령, 린종홍(林宗弘)은 "80년대 대만의 산업구조는 중소기업 중심이었지만 2010년대는 대기업 OEM업체 위주로 변화하였고, 기업 간 관계는 수평적 네트워크에서 재벌과 OEM업체의 수직적 네트워크로 전환되었다."(Lin 2014, 60; 린종홍 2014, 26)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과의 경제협력 과정에서 기회를 잘 잡은 몇몇 대만 민영기업은 그 규모를 확대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17) 대만 정부의 위탁으로 진행된 것이므로 사실상 대만 정부의 의향이 어느 정도 반영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한 중소기업 및 중산층은 대규모로 성장한 자본에 대해 상대적으로 하락한 지위를 체감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실업과 비정규직의 확대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들은 양안서비스무역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주도적 세력들이다. 이들의 반대논리 중 핵심은 양안서비스무역협정이 체결되면 대만인들의 일자리 박탈과 임금수준 상승 제약, 그리고 이로 인해 소득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궁극적으로는 대만의 복지 수준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다.

그들의 우려는 특히 서비스업의 특성과 관련해서 증폭된다. 서비스업은 대만 경제의 약 70%의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다. 그런데 서비스업은 대부분 저소득층, 급여 노동자를 기반으로 하므로 그 종사자 중 사회적 약자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2012년 기준으로 대만 내 파트타임·임시직 노동자 비율은 서비스업이 6.9%로, 공업(6.8%)이나 농축수산업(5.54%)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업의 경우 업계 성격이 반영된 건설업 분야의 파트타임·임시직이 포함되어 전체 수치가 높은 편이지만, 서비스업은 다양한 업종에서 임시직 비율이 보편적으로 높은 것이다(行政院主計總處 2012). 이러한 비정규직 종사자는 보통 임금과 복지 면에서 대우가 좋지 않고, 사회적 지위가 낮으며, 사회보장 향유도 역시 낮아 사회적 약자층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양안서비스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중국 노동자들이 이 분야에 진입하게 되면, 이들의 불안정성은 더욱 증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들의 우려는 대륙 서비스기업의 대만 진출로 그들이 입게 될 실업, 임금 동반 하락 등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대만에 중국자본 혹은 대만자본이 서비스업체를 설립한 후 대륙에서 고용이 이뤄지는 형태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처럼 2010년의 ECFA 체결 국면과 비교해 보면 2014년의 양안서비스무역협정 체결 국면에서 제기된 반대 논리는 전통적인 통일-독립논쟁과 함께 계급이해와 관련된 측면에서 제기되는 주장이 매우 많아진다. 이것은 물론 경제협정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간 과잉 단순하게 제한된 대만사회의 갈등축의 복잡한 양상이 비로소 전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다음 절에서는 계급갈등과 계급갈등이 교차하는 구체적인 양상들을 살펴볼 것이다.

3. '양안서비스무역협정' 체결 과정에서 드러난 계급갈등과 계급갈등의 교차 양상

양안서비스무역협정 체결 국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입장 분화가 발생한 것은 민진당을 지지했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민진당을 지지했던 자본가 집단들은 ECFA와 양안서비스무역협정을 지지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더 이상 서술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이 문제를 여전히 계급갈등의 축으로 해석하는 집단이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리덩후이 전 총통을 들 수 있다. 그는 양안서비스무역협정 비준 문제에 대해 “중국이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도 대만을 삼킬 수 있게 된다.”는 다소 감정적인 발언으로 반대 입장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연합통신』 2014/05/09). 이들과 똑같은 인식에 기반하되 정반대의 입장에 있는 반응도 국민당이나 중국공산당 관계자로부터 나오기도 했다. 그들은 해바라기 학생운동 확산 배후에는 민진당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¹⁸⁾ 그들이 말한 민진당이란 대만독립을 주장하는 ‘단일한 세력으로서의 민진당’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민진당은 더 이상 단일한 집단이 아니었다. 리덩후이가 여전히 계급대립 및 통일-독립의 틀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오히려 민진당의 ‘계급적 분화’에 직면한 당혹감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사실, 지지자들이 다양한 계급적 입장으로 분화된 민진당은 경제문제가 걸려 있는 영역에서는 경제논리만으로는 당의 통일성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ECFA 반대운동에 나선 민

18) 대만 『中央日報』는 2014년 3월 24일 “本報社評--再民主也不能容忍非法暴力” 기사에서 학생들이 입법원을 점검할 당시 누군가 유압가위와 사다리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학생운동이 아니라 누군가 배후에서 조종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중국 사민대학 대만연구원 천센차이(陳先才) 부원장 또한 『兩岸公評網』에서 “太陽花學運對民進黨改革的影響相當有限” 해바라기 학생운동은 그 배후의 정당 요소와 정치 투쟁의 책임을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진당이 경제문제를 경제적 접근으로 풀지 못하고 '대만 주체성'이나 '주권 침해' 등의 정치적 구호로 대체하려 한 것”(문명기 2012, 110)은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민진당 내에서 정치적 이유에 더해 경제적 이유, 즉 계급적 관점에 따라 반대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 즉, 이들은 양안서비스무역협정이 자본가들을 제외하고는 보통의 대만사람들에게는 부정적 결과를 갖고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이들은 이러한 부정적 결과가 중국과의 경제협력 자체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리덩후이의 입장과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이 강해지면 민진당 내의 '자본가'적 입장과도 분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들의 입장이 급진화하면, 소위 '좌파-독립' 세력이라고 불리는 세력과 거의 유사한 입장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린중홍은 이런 입장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

민진당 내부의 의견 분화는 민진당 주미대표가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양안서비스무역협정 반대시위에 대한 설명회를 연 자리에서 밝힌 “민진당은 양안서비스무역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시위 세력이 주장하는 감독메커니즘의 법률화, 양안서비스무역협정에 감독 조항 삽입 등에 대해 찬성하는 것이다. 한편, 민진당은 자유무역과 시장개방,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대해서 찬성한다.”(『中央社』 2014/04/05)는 발언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보인다. 혹은 민진당의 현재 모습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이 발언이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이 발언에 따르면, 민진당은 반대시위 세력, 즉 '해바라기학생운동' 세력과 완전히 일치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장 일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진당이 거리를 두고 있는 반대 입장은 무엇인가?

그것은 양안서비스무역 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가장 계급적인 관점에서 반대하는 세력인 대만녹색당(臺灣綠黨)과 같은 '좌파-독립'¹⁹⁾ 세력의 입장이다. 이들은 중국대륙과 경제적·정치적 통합이나 통일을 추진할 이유

19) 좌파통일(좌독) 개념은 1950년대에 이미 제기된 것이나 1979년 미려도 사건 이후 대중적 세력을 얻었고 1990년대 중반 리덩후이 집권 이후에는 독립 논의까지 본격화되면서 좌파통일, 우파통일에 이어 좌파독립, 우파독립의 개념으로까지 세분화되었다.

가 없는 세력이며, 이들은 정치적 이념이나 현실적 측면에서 모두 중국대륙을 배제하고자 한다. 이들은 중국을 사회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국가가 아닌 존재로 규정하고, 중국과의 통일이 대만의 복지향상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대만은 복지국가 모델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원자력발전소 건설 반대와 같은 환경보호 이슈에 비교적 중점을 둔다. 대만녹색당은 양안서비스무역 협정체결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 이유는 “1. 감독기제 부재 2. 공공서비스의 사유화 및 국토 안전도 하락 3. 서비스무역협정이 더욱 심각한 노동착취와 빈부격차를 초래하고 녹색경제에 위배됨 4. 아시아 및 세계의 불공정 자유무역 반대”²⁰⁾라는 것이다. 이들은 중국과의 서비스무역협정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자체를 문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입장은 분명 해바라기학생운동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기존의 대만독립파로 분류할 수 있는 세력들의 입장분화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중국과의 통일을 주장하는 세력들의 입장을 검토할 차례이다. 이들 중 가장 견고하게 양안서비스무역협정 체결을 지지하는 세력은 '좌파-통일' 세력인 대만노동당이다. 대만노동당은 국공내전 당시 중국공산당을 지지했으며, 2·28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반(反)국민당을 기치로 항쟁에 참여했고, 이후 대만 내에서 국민당에 대한 대안으로 '대만독립'이 아니라 '적색조국'을 선택한 사람들이 1988년에 결성한 정당이다. 대만노동당의 당원들은 대만의 개업시기 동안 국민당 정부의 백색테러에 의해 혹독한 탄압을 받아 장기간 수감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있으며, 중국과 대만의 '적색통일'을 주장하고 있어 대만 내에서 가장 적극적인 중국통일론자들로 간주된다. 이들은 과거 총통선거에서 당 차원에서 국민당 후보를 지지하기도 했다. 국민당은 적어도 대만독립을 주장하지는 않기 때문이었다(김민환 2012, 157-158). 이들은 여전히 중국을 '적색조국'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양안서비스무역협정 체결을 대만 내의 계급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좌파-독립' 세력의 전망을 기

20) “綠黨聲明：拒絕黑箱協議出賣台灣國土永續和世代正義”, <http://e-info.org.tw/node/98190>. (2014년 8월 25일 검색)

각한다.²¹⁾ 따라서 이들은 여전히 이 문제를 계급 이해의 접근이 아닌 통일-독립의 이분법과 죽군갈등이라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민당 내부의 분화는 눈여겨볼 만하다. 사실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 국민당이기에 때문에 국민당 내부의 사람들은 모두 양안서비스무역협정 체결에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국민당을 지지하는 외성인 중 '기득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에 반대하는 견해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 민진당에서는 '자본가'들이 이탈한 반면, 국민당에서는 '노동자'들이 이탈한 것이다.

사실 국민당이 양안서비스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한 가장 큰 이유는 변화하는 양안관계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들은 대만을 40년 이상 통치해왔으며, 국영대기업과 당영(黨營)기업을 통해 경제적인 특권을 누려왔다. 대만의 민주화 이후 정치적으로는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힘들었지만, 경제적인 특권은 여전히 누리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민진당을 지지하는 민영자본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그 자체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되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통일-독립 프레임 속에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주장하고 실행하는 것은 그들의 정치적 이익에도 부합했다. 국민당의 이런 움직임은 통일 및 시장경제에 대한 입장에서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의 입장 차가 점차 좁혀진 것이 결정적이었다. '좌파-통일' 세력인 대만노동당이 중국을 여전히 '적색'으로 보고 있는 반면, 국민당은 중국이 이미 자본주의화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당 내부의 모든 사람들 혹은 국민당 지지자 모두가 이런 특권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이나 양안서비스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해서 국민당의 공식입장과는 다

21) 노동당을 구성하는 주요 주축인 노동인권협회와 공회단체는 해바라기학생운동 발발 후 "입법원 질서 상설 속히 마무리, 서비스무역협정 조기 실시 호소"(2014/03/25)라는 성명을 발표하여 "양안경제무역 왕래 강화가 동아시아 지역 평화, 양안 평화에 유리하며 취업 기회를 창조하는 서비스무역협정은 지지한다."고 주장하였다. <http://www.taiwanlaborparty.com/index.php/2010-02-14-04-08-25/530-2014-03-27-03-15-57>. (2014년 4월 20일 검색)
이는 대만과 대륙의 노동운동계, 좌파인사들로부터 비판을 야기하기도 했다.

를 여지가 매우 많다. 실제로 양안서비스무역협정 체결 국면에서 국민당 내부 인사 및 국민당 지지자들 중 이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자주 분출되었다.²²⁾ 이들의 발언은 직접적으로 계급적 관점을 수용하고 있지 않지만, 국민당의 계급적 분화라는 관점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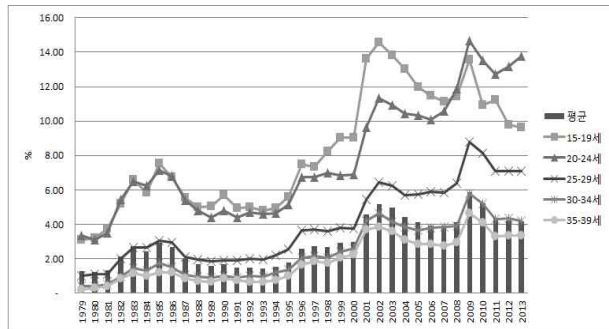
V. '양안서비스무역협정' 체결 논란과 세대 효과의 문제

양안서비스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해서 별도로 언급해야 할 것이 세대문제이다. 그것은 이 협정체결 반대운동의 가장 강력한 세력이 입법원을 점령한 대학생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앞에서 본 것처럼, 이들은 민진당 등 양안서비스무역협정 반대세력에 의해 전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문제를 별도로 다룰 필요가 있다.

대학생들이 이 운동에 헌신한 배경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ECFA체결 후 4년 동안의 성과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림 1>을 보면, 실업률이라는 측면에서는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모든 연령대에서 2001년을 기점으로 실업률이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며, 대만의 청년(15-24세) 실업률은

22) 국민당 내 의견 충돌은 왕진평(王金平) 입법원장이 서비스무역협정 재검토와 '관리감독조례' 제정을 골자로 하는 성명(2014/04/06) 발표로 점화되었다. 왕 입법원장의 성명 이후 학생들은 입법원이 자신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생각해 입법원에서 자진 해산하면서 24일 간의 절거 사태는 끝났지만, 마잉주 총통과 국민당 내에서는 이에 대해 다른 내용을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왕진평 입법원장이 우려한 것은 대만의 실업 심화 등 비교적 노동자의 입장에서 양안서비스무역이 가져올 피해를 걱정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국민당 입법위원인 덩서우중(丁守中)은 자신의 페이스북(2014/03/20)에서 대만의 학생운동이 태극처럼 장기 투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며 마잉주 정부가 대만이 취약한 산업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양안서비스무역협정을 강행하려는 바람에 오히려 통일과 독립 갈등을 확산시켰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그는 양안서비스무역협정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의 발언에 대해 일부는 선거를 앞두고 둔 포퓰리즘 발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으나, 양안서비스무역 찬반 양 진영에서 모두 주목하였으며 국민당 내 반대의견으로 여겨졌다(『東森新聞』 2014/03/20 참고).

2001년 이후 평균 10%를 초과하였고, 2008년 이후에는 상승률이 더욱 빨라지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2009년에 역시 모든 연령대에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최근 대만의 실업인구 및 빈곤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두 시기가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모색되던 시점과 겹쳐 있다는 점에서 양안 간의 경제협력을 추동하는 대만 내부의 동력을 짐작하게 해준다. 즉, 대만 내의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이 통계가 제시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림 1> 대만의 실업률 추이 (1979-2013년/단위: %)

* 대만에서 청년실업률 통계 기준은 15-24세임

* National Statistics, R.O.C(Taiwan)

물론, 이 통계는 역으로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대만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의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즉,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본격화된 이후 대만의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거나,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실업률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입장을 4장에서 언급한 바 있다.

앞의 주장과 뒤의 주장 중 적어도 대만의 청년(15-24세) 실업률 통계, 특히 2010년 ECFA 체결 이후의 통계는 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2010년 ECFA 체결 이후 실업률이 약간이나마 낮아지거나 정체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청년 실업률의 경우, 특히 20-24세 청년의 실업률은 반대로 이 시기 동안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 연령대의 실업률의 증가가 ECFA 체결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별도로 엄밀하게 분석해야 알 수 있겠지만, 적어도 대학생들이 양안서비스무역협정 체결에 가장 앞장서서 반대한 이유 중 하나를 추측할 수 있게 해준다. 더욱이 대만 재정부에 따르면, 2013년 최하위 5% 가구의 연평균 소득과 최상위 연평균 소득의 격차는 96배로 사상 최고치에 달하였다. 이는 2008년 65배, 2009년 75배, 2010년 93배로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몇 년 사이 대만의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소득격차와 낮은 급여에 따른 피해는 청년 세대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대만 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 대졸자(초급대 포함)의 평균 초임은 2만 5천 175위안(NTD)으로 14년 전보다 더 하락하였다. 대만 전체의 월평균 급여는 1991년 2만 6,881위안에서 2013년 4만 5,664위안으로 증가한 반면, 대졸자들은 22K로 대변되는 최저임금 대상자로 노출되어 있다. 즉, 청년층은 최근 들어, 특히 ECFA 체결 이후 자신들의 처지가 악화되었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집단이었던 셈이다(『中國時報』 2014/05/30). 따라서 이들 연령대의 대학생들의 집단행동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으로, 그것은 대만의 청년들이 양안서비스무역협정 체결이 가져올 계급에 따른 효과의 차이를 인지하는 것과도 이어질 수 있다.

양안서비스무역협정 체결 반대에 대학생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한 이유와 관련해서도 세대변수가 중요하지만, 이 논문의 주제인 대만 사회의 갈등구조의 변화와 관련해서도 향후 세대변수를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죽군갈등에서 계급갈등으로 교차하고 있는 순간을 집단적으로 체험한 이들은 앞으로 사회갈등과 관련해서 독특한 입장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실업률, 중국과의 경제협력 과정에서 발견한 계급적 이익의 분열, '해바라기운동'이라는 대규모 대중운동을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이 세대의 집단적 움직임은 대

만 사회의 갈등양상을 바꿀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이 논문의 입장이다.

VI. 맺으며

지금까지 '해바라기학생운동' 등 최근 대만에서 양안서비스무역협정 체결을 둘러싸고 진행 중인 논란을 대만 사회의 갈등구조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대만 사회의 갈등구조를 분석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죽군갈등이나 죽군갈등에 기반한 통일-독립 갈등을 변수로 삼은 반면, 이 논문에서는 양안서비스무역협정 체결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계급 및 세대 변수에 의해 보다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민진당을 지지하던 본성인 기업가들이 민진당의 입장과는 반대로 양안서비스무역협정 체결을 지지하는 점, 국민당을 지지하던 보통사람들이 국민당의 입장과는 반대로 양안서비스무역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점 등에 주목하면서 계급이익에 따른 대만 사회 갈등구조의 다각화를 언급했다. 또한, 세대변수를 도입하여 2010년 ECFA 체결 이후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실업률이 약간이나마 낮아지거나 정체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20-24세 청년의 실업률은 반대로 이 시기 동안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해바라기학생운동'의 배경에는 세대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양안서비스무역협정 체결 국면에서 드러났던 대만 사회갈등 양상의 다각화가 어느 정도까지 전면화 되어 그것이 대만사회 자체를 바꾸어 놓을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대만 사회갈등의 주요 변수로 작용했던 죽군 간 갈등이나 통일과 독립의 이분법이 세대 간 갈등과 계급 갈등이라는 변수로 재편될 수 있음을 예측하는 것은 '해바라기학생운동'으로 분출된 대만 청년층의 계급 인식이 대만 사회의 갈등구조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가설이 전제된 것이다. 그러나 입법원 점거에 참가했던 수많은 학생들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안에서도 입장은 매우 다양하게 나뉘진다. 실제로 시위 참가 학생들 중에는 양안서비스무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나 대만 독립의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동조

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으며, 평소 정당 지지에 있어서는 국민당에 보다 가까웠던 학생들도 미래 사회복지의 퇴화와 삶의 질 하락을 우려하며 시위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해바라기학생운동'을 주도했던 학생들도 입법원 점거 해산 이후,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앞으로 '양안서비스무역협정' 반대 활동 전개에 있어 몇 개의 진영으로 나뉘지는 모습도 나타났다(『蘋果日報』 2014/05/31). 때문에 '해바라기학생운동'으로 분출된 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가 대만의 사회갈등 구조의 축을 변화시키는 데에 비교적 통일적이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지금으로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대만 사회의 갈등을 규명하는 데에 핵심 변수로 여겨지던 죽군 간 이해나 통일독립의 이분법적 논리는 점차 퇴색되어 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 근거로 2014년 3월에 '양안서비스무역협정' 체결을 반대하며 일어난 대만 대학생들의 입법원 점거 사건과 시민까지 합세하면서 일어난 대규모 반대 시위가 기존의 전통적인 이해 방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몇 가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양안서비스무역협정'과 '해바라기학생운동'을 바라보는 정당의 이해와 정당 지지자들의 인식도 예전과는 다른 구조로 재편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논문에서 분석한 대만 사회갈등 구조의 변화 현상이 타당성을 가진다면, 이는 한편으로 대만 사회의 갈등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만 사회의 갈등구조를 바라보는 보다 섬세하고 새로운 틀을 이론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하는 것이다. 또한 대만사회 갈등의 두 축인 민진당과 국민당은 사실 '적대적 공존' 혹은 '적대를 가장한 공존'의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즉, 중국대륙을 바라보는 국민당과 민진당의 이데올로기적 인식이 큰 틀에서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합의하지 못하는 민진당 내 일부 세력은 민진당에서 분리되어 향후 대만 내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음을 타진해 볼 수 있다. 어쨌든 이들 두 정당의 '내부 투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장기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대만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일지도 모른다.

| 참고문헌 |

김민환 (2012). “동아시아의 평화기념공원 형성과정 비교연구: 오키나와, 타이페이, 제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문명기 (2012). “양안관계, 제3의 모델은 없는가: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과 역사적 전망.” 최원식·백영서 엮음, 『대만을 보는 눈: 한국-대만 공생의 길을 찾아서』. 서울: 창비, pp. 100-116.

박윤철 (2012a). “대만의 사회구조적 특징과 경제발전: 비교사회학적 관점에서 한국과 비교.” 『중국학연구』, 제60권, pp. 181-201.

____ (2012b). “대만 민주화과정과 사회운동의 변화.” 최원식·백영서 엮음, 『대만을 보는 눈: 한국-대만 공생의 길을 찾아서』. 서울: 창비.

양태근 (2012). “민주화와 본토화의 이중주.” 최원식·백영서 엮음, 『대만을 보는 눈: 한국-대만 공생의 길을 찾아서』. 서울: 창비, pp. 81-99.

윤영도 (2007). “냉전기 국민화 프로젝트와 ‘진통문화’ 담론: 한국·타이완의 비교연구.” 『중국어문학논집』, 제43호.

장영희 (2012). “대만의 경제발전모델.” 최원식·백영서 엮음, 『대만을 보는 눈: 한국-대만 공 생의 길을 찾아서』. 서울: 창비, pp. 168-186.

정환우 (2014). “4억佛 유발 vs 대륙 종속 심화.” 『Chindia Plus』, 5월호. 서울: 포스코경영연구소, pp 26-27.

지은주 (2008). 『대만의 독립문제와 정당정치: 민주화 이후 정당체제의 재편성』. 서울: 나남.

린종홍 (2014). “더 이상 ‘창업의 섬’ 아니다: 中 의존도 심화로 빈부격차 등 사회문제 확산.” 『Chindia Plus』, 5월호. 서울: 포스코경영연구소, pp 26-27.

왕푸창 (2008). 『갈등의 정체성: 현대 대만사회의 에스닉 상상』. 지은주 역. 서울: 나남.

이소봉 (1990). 『대만 민주운동 40년』. 김철수 외 역.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Gregor, James & Chang, Maria Hsia & Zimmerman, Andrew (1982). *Ideology and Development: Sun Yat-sen and the Economic History of Taiwan*. Berkely: Univ. of California Press.

Lin, Thung-Hong (2014). “Small-Medium Enterprises(SMEs) Withering Away: Taiwan’s Industrial Transformation under China Impacts.” 서울대학교-대만중앙연구원 사회학교류 워크숍 자료집 『Post-War Experiences in South Korea and Taiwan』. 서울. 4월.

Wang, Jenn-Hwan (2007). “From technological catch-up to innovation-based economic growth: South Korea and Taiwan compared.” *Journal of Developmental Studies*. Vol. 43, No. 6.

童振源 (2009). 『東亞經濟整合與台灣的戰略』. 台北: 正大出版社.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2011). 『海峽西岸城市群發展規劃』. 臺北: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國家研究政策基金會 (2009). “論ECFA的重要性, 憲政(評) 098-034號.”臺北: 國家研究政策基金會.

中華經濟研究院 (2009). 『兩岸經濟合作架構協議之影響評估報告』. 臺北: 中華經濟研究院.

行政院主計總處 (2012). “人力運用調查.” 『社會指標統計年報』. 臺北: 行政院

류성무. “리덩후이 시진핑, 마오쩌둥보다 야심가.” 『연합통신』, 2014년 5월 9일.

廖漢原. “民進黨對美論述 非全面反服貿.” 『中央社』, 2014년 4월 5일.

潘杏惠. “勞動部調查 大專今起薪不如14年前.” 『中國時報』, 2014년 5월 30일.

“長榮集團總裁張榮發支持九二共識 拒見蔡.” 『鳳凰網』, 2012년 1월 4일.

何飛鵬. “張榮發的選擇.” 『商業周刊』, 2003년 4월 18일.

“綠黨聲明: 拒絕黑箱協議出賣台灣國土永續和世代正義.” 2014년 3월 22일. <http://e-info.org.tw/node/98190>. (2014년 5월 7일 검색)

“本報社評-再民主也不能容忍非法暴力.” 『中央日報』, 2014년 3월 24일. http://www.cdnews.com.tw/cdnews_site/docDetail.jsp?coluid=110&docid=102691224&page=1. (2014년 6월 3일 검색)

“聲明-勞動人權協會及工會團體呼籲 「儘快結束立法院失序, 早日落實服貿協議」.” 2014년 3월 25일. <http://www.taiwanlaborparty.com/index.php/2010-02-14-04-08-25/530-2014-03-27-03-15-57>. (2014년 4월 20일 검색)

“與國民黨唱反調? 丁守中: 實質審查服貿.” 『東森新聞張』, 2014년 3월 20일. <http://www.ettoday.net/news/20140320/337049.htm> (2014년 4월 19일 검색)

財團法人國家政策研究基金會 (2011). “什麼是22K方案?” 『國政評論社會(評) 100-08 5號』 <http://www.npf.org.tw/post/1/10093>. (2014년 4월 20일 검색)

財團法人海峽交流基金會·海峽兩岸關係協會 (2013). “服務貿易特定承諾表: 附件一.” 『服務貿易特定承諾表』, www.ecfa.org.tw/index.html. (2014년 4월 20일 검색)

陳琴富. “莫忘來時路/1月3日-張榮發挺九二共識.” 『中時電子報』, 2014년 1월 3일. <http://www.chinatimes.com/newspapers/20140103000936-260109>. (2014년 9월 2일 검색)

陳先才 (2014). “太陽花學運對民進黨改革的影響相當有限” 『兩岸公評網』, <http://www.kpwan.com/news/viewNewsPost.do?id=905>. (2014년 5월 6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14년 08월 31일 |
| 논문심사일 : 2014년 09월 05일 |
| 게재확정일 : 2014년 09월 19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1, No. 3 (2014)

CSSTA and the change of social conflict structure in Taiwan

Min-Hwa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Hyun-Wook Cheng

(Graduate Institute of National Development, National Taiwan Univ.)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CSSTA(Cross-Strait Service Trade Agreement) in terms of recent changes of social conflict structure in Taiwan. This paper argues that the problems of social class and generation effect make the social conflict more complicated unlike previous studies which focused on ethnic tension or Independence debate in Taiwan. Especially, we tried to take note of the potential division in Democratic Progressive Party(DPP) due to class distinction. This is based on the native Taiwanese entrepreneurs who are the supporters of CSSTA in contrast with the position of DPP. We also pointed out that the 'Sunflower Student Movement' has caused by generation problem, noting the unemployment rate among youth people between 20-24 has further increased differently from the other age groups since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signed in 2010. This study expects that the concept of ethnic, class interests and generation gap will make the social conflict more complex in Taiwan hereafter.

• Key words: Sunflower Student Movement,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ECFA), Cross-Strait Service Trade Agreement(CSSTA),
class interest, generation effect